주요 내용

▌2단계 4대 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 ▐

□ **2단계 개혁의 주요 내용**

· **(기본 방향)**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기능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을 통해 4대 부문의 경쟁력 강화 추구

· **(공공 부문)** 전자정부화, 재정관리 제도 혁신, 민원편의성 제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에 중점을 두어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

· **(기업 부문)** 기술과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/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양대 성장축이 되도록 함

· **(금융 부문)** 채권시장 활성화, 자본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을 구축

· **(노동 부문)** 참여와 협력의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'일'을 통한 생산적인 복지 체제 구현

□ **주요 보완 과제**

· **(기본 과제)** 일관성, 구체성 및 현실성에 근거하고, 우선순위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

· **(시장 기능 존중)**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'금융기관의 시장 규율 강화 → 여타 부문의 시장 기능 강화 →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'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

· **(하드웨어적 구조조정 보완)**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개혁이 부족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효율성과 정책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할 것임

· **(발전적인 양대 성장축 육성)** 기존의 대기업 억제형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기업과 중소/벤처기업이 조화롭게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현안 분석

2단계 4대 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

기본 방향

- **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4대 부문의 경쟁력 강화 추구**
  - **(시장 중심)**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탈피하고 시장 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 여건 마련
  - **(소프트웨어 중심)**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선진적 경제시스템을 창출하고, 4대 부문의 내부 역량 강화

부문별 주요 내용

- **(공공 부문) 21세기 지식·정보화 사회에 맞게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에 중점을 두어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**
  - **(전자정부화)** 정보기술 활용도 제고, 공무원 직급별 정보화 능력 기준 마련, 고객 위주로 업무·정보 시스템 재설계
  - **(공무원 능력 제고)** 연봉제·성과급제 확대, 민간과 연계된 보수결정 시스템 마련, 민간기관에 대한 파견과 휴직 제도 활성화, 정보·지식 중심의 교육
  - **(재정관리 제도 혁신)**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내실화,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대, 국가채권·기금·부동산 관리 강화,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공시 의무화
  - **(생활편의적 민원 개혁)** 각종 민원서류 축소, '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'을 전 민원부서에 도입, '행정품질 지표' 개발, '행정개혁 시민대회' 개최
  - **(공기업 경영 혁신)** 민영화를 통해 국민 참여 기회 확대, 민간기업형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, 전자구매·입찰 체제 구축, 감사위원회 도입
- **(기업 부문) 기술과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/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양대 성장축이 되도록 함**

· **(금융 선진화를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)** 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조기 정착, 대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
· **(기업 회생·퇴출 제도 개선)** 사전조정제도(pre-packaged bankruptcy)의 도입, 기업구조조정기구(CRV)의 설립과 활성화, 도산 관련법 정비

· **(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체계 선진화)** 상장기업의 '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'의 준수 여부 공시 의무화,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능력 제고

· **(기술 중심의 기업 개혁 추진)** 중소/벤처기업 지원·육성, 대기업 핵심역량 집중 유도, 「국가기술혁신시스템(NIS)」을 재구축, 중소/벤처/대기업간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형성

– **(금융 부문)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중심의 금융구조를 통해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 구축**

· **(채권시장 활성화)** 국채발행제도와 채권결제제도 개선, 채권평가시스템 구축, 내외국인의 채권 수요 기반 확충,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 설립

· **(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)**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 증권거래 차단, 증권시장의 국제적 제휴 추진, 외국기업의 직상장 허용

· **(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)** 장외전자거래시장 및 제3시장 개설, 부산 중심의 금융선물시장 활성화, 국제적인 기준의 회계·감사 제도 도입, 사이버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

· **(금융시장 구조조정)** 비상장 금융기관의 상장을 통해 소유 분산 촉진, 금융기관간 겸업과 합병을 통한 대형화 유도,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,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, 국제수준의 건전성 감독 기준 제정

– **(노동 부문) 참여와 협력의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'일'을 통한 생산적인 복지 체계 구현**

· **(신노사문화 정착)** 열린 경영의 확대, 지식근로자 육성 지원, 작업장 혁신, 성과배분 등 활성화로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애사심 제고,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,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

· **(고용안정·능력개발)** '밀착형' 고용 안정 서비스 체제 구축,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실시, 고용보험·산재보험·실업급여 등의 노동보험제도 개편으로 사회안전망 확충

· **(소득분배 구조 개선)** 우리사주제도와 성과배분제의 활성화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, 최저임금제와 임금채권보장법의 확대 적용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,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 연장 및 주거안정 지원 강화 등으로 중산층·서민층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지원

· **(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)** 근로자 파견제도의 조기정착 유도, 임시·일용직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, 근로기준제도의 합리적 개선

2단계 개혁 방안의 미비점

–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단계 개혁의 성과를 지속·발전시키면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

· 그러나 기본 방향과 세부 정책이 불일치하거나, 현재의 상황을 다소 오해하고 있는 등 일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음

– (정책 일관성 부족)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이 불일치하거나,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한 면이 있음

· 기본 방향에서는 시장 규율을 중요시한다고 하였으나, 실제 세부 정책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음

· 가령,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는 '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'이라는 1단계 개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, 정부가 제정한 준칙과 경영 방식을 금융기관에 강요하는 정책내용을 담고 있음

· 대기업과 중소/벤처기업을 한국경제의 양대 성장축으로 설정하였으나, 세부적인 계획에서는 중소/벤처기업 육성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만 제시했을 뿐, 대기업 정책은 '핵심역량 강화'라는 기존의 정책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

– (현실 인식의 오류) 하드웨어적인 개혁이 완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

· 특히 공공 부문 구조조정의 경우, 인력·조직 등의 하드웨어적인 개혁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됨

주요 보완 과제

– **(기본 과제) 일관성, 구체성 및 현실성에 근거한 정책 점검이 필요함**

· 현실에 근거하여 기본 방향과 세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함

· 이를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보일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할 것임

– **(금융의 시장 기능 존중) 금융기관의 시장 기능 강화가 금융산업과 여타 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의 핵심임**

· '금융기관 감독 강화 → 기업의 시장규율 강화 → 기업 구조조정 유도'라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'금융기관의 시장 규율 강화 → 여타 부문의 시장 기능 강화 →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'라는 사고방식이 필요함

· 정부는 여신심사 제도,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 등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, 금융기관이 이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함

– **(하드웨어적 구조조정 보완)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개혁이 부족한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**

· 조직 효율화, 민영화 등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

· 공공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정책 효율화와 2단계 정책 신뢰성 제고를 꾀해야 할 것임

– **(발전적인 양대 성장축 육성) 대기업과 중소/벤처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양대 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함**

· 기존의 대기업 억제형 정책에서 탈피하고 대기업의 사내외 벤처 사업, 지식기반화 노력, 중소/벤처기업과의 공동 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

·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/벤처기업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고 조화롭게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(정반석 연구위원 *bsjoung@hri.co.kr* ☎ *724-4045*)

(김병우 주임연구원 *bwkim@hri.co.kr* ☎ *724-4028*)